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세계 5위 목표” 02



Economy

↓ 코스피	↓ 코스닥
2497.09 (-1.72)	799.24 (-19.62)
↓ 금리 (미국 기준)	↑ 환율 (원/달러)
3.261 (-0.007)	1334.60 (+5.20) (1.31)

삼성 D램 드디어 흑자 실적회복 신호탄 쏘았다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실적 매출 67.8조, 영업이익 2.7조 전년비 각각 3.8%, 34.4% 하락 반도체·가전·디스플레이 부진 생성형 AI 따른 D램 사업 흑자

하향 감소에도 2조73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연간으로도 13조100억원, 전년(11조3800억원)보다 20%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

하반기 매출 14조3900억원에 영업이익 1조17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 안팎 성장을 이어갔다.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 반등 본격화

그러나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 회복이 본격화됐다고 올해 실적에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IT 업황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세트 사업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D램 사업이 흑자로 전환됐다. PC와 모바일 등 전방 산업 회복과 함께 생성형 AI 서버 수요 증가로 HBM과 DDR5 등 첨단 공정 제품 판매가 대폭 확대됐다는 것.

삼성전자는 특히 생성형 AI에 따른 서버용 D램 비중이 과반을 넘었다며, SSD도 50% 가까이 판매 증가를 보이는 등 메모리 수요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고 수준도 큰폭으로 개선, D램과 낸드 모두 올해 상반기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메모리 부문도 좋았다. 스마트폰 수요 증가와 함께 엑시노스 2400 출고로 매출과 손익이 모두 개선됐고, 파운드리도 연간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하며 성장 가능성을 높였다. 3나노 및 2나

삼성전자가 실적 회복 희망을 확인했다. 지난해 반도체에서만 15조원 규모 적자를 냈지만, D램이 드디어 흑자로 전환하며 올해 실적 정상화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2023년 4분기 매출 67조 7800억원에 영업이익 2조8200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 3.81%, 영업이익은 34.40%나 하락한 수치다. 연간 기준으로도 매출 258조9400억원에 영업이익6조5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33%, 84.86%나 급락했다.

반도체 사업 부진이 원인이다. DS부문이 4분기에도 매출 21조6900억원에 영업손실 2조1800억원에 그쳤다. 연간으로는 매출 66조5900억원에 영업손실이 14조8800억원에 달했다.

가전과 디스플레이 등 사업도 소폭 하락했다.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VD/가전 사업은 1조2500억원, 삼성디스플레이도 5조5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안팎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이 최악을 막았다. MX사업부문 영업이익이 4분기 출



국회 간 증기인들,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3500여 명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7개 단체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이 ‘산재예방 잘할테니, 사장처벌 없애달라’ 등을 적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노 GAA 기술 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고성능컴퓨팅을 중심으로 판매 비중과 신규 수주를 늘렸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도 비수기 속 수익성을 높인 데 의미를 뒀다. 신제품 출시 효과가 둔화되면서 전체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프리미엄 태블릿과 웨어러블 등으로 견조한 판매를 유지했다. 설계 최적화와 리소스 효율화로 수익성도 두자릿수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네트워크 역시 해외에서 매출을 늘리는데 성공했다.

◆ 멈춤 없는 투자

삼성전자는 어려운 실적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며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주담대 못 갚아 경영권 흔들 바이오업계 ‘자금난’ 현실화

엔케이맥스·진시스템·이오플로우 최대주주들 주식담보대출 상환 못해 주담대도 이어져... 경영·주가 추락

자금난에 빠진 바이오 기업들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다. 주식담보대출을 갚지 못한 기업들의 최대주주가 하루 아침에 바뀌거나 사라지는 사례가 잇따르며 기업경영과 주가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엔케이맥스 주가는 하한가(29.89%)까지 추락, 2135원에 거래를 마쳤다. 경영권 불안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엔케이맥스가 지난 30일 공시한 바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박상우 엔케이맥스 대표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1248만2184주(15.06%)에서 62만8902주(0.76%)로 줄어들었다. 박 대표가 보유한 주식 1072만6418주 가운데 1072만1000주가 지난 24일 장내로 갑자기 쏟아진 것이다. 주가는 당일 돌연 하한가로 급락했다.

이유는 이랬다. 박 대표와 그의 친인척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에서 돈을 빌렸는데 주가가 추락하면서 최소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

지 못하자 기관투자자들이 담보로 갖고 있던 주식을 반대매매로 장내에 팔아버린 것이다. 지난 11월까지 1만3000원대를 유지하던 엔케이맥스 주가는 연말부터 추락을 거듭하며 반대매매 직전인 지난 23일 5000원대까지 내려앉은 바 있다. 이번 반대매매로 인해 박 대표 명의의 남은 주식은 5418만주, 지분율은 0.01%로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

회사측은 “최대주주가 부채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의 빠른 해결과 주가 회복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지배구조를 안정시킬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자금난에 경영권이 흔들리는 사례는 지속되고 있다. 최대주주들이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주가 하락으로 대출 연장도 어려운 이종고를 겪고 있는 탓이다.

진시스템은 지난 17일 서유진 대표가 신한투자증권과 맺은 주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보유지분 40만주를 블록딜을 통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8835원으로 총 금액은 33억원 규모다. 주식 매도로써 대표의 지분율은 기존 21.02%에서 15.22%로 낮아졌다. 대출을 받은 지난해 9월 3만2000원까지 올랐던 진시스템 주가는 현재 7800원대까지 추락한 상태다.

이오플로우 최대주주인 김재진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한국투자증권에서 받은 주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대출 만기가 지난해 10월 31일까지였는데 이를 연장하지 못한 탓이다.

<2면에 계속>



엔케이맥스 본사.

/이세경 기자 seilee@

당국,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 발표

대구銀, 시중은행 파란불... “직원 사고 영향 없다”

신규인가 아닌 ‘인가내용 변경’으로 법률관계 승계 여부 불확실성 해소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임직원 위법행위는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가절차도 원하는 경우에만 예비인가를 거치도록 해 바로 본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르면 1분기(1~3월)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과 절차’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실제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사례도 없어 인가 방식과 절차를 논의하게 됐다”며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일부 인가요건과 영업구역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전환 방식과 절차를 명확히 해 법적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시중은행 전환, ‘신규’ 대신 ‘변경’

우선 금융위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 시 인가방식을 ‘신규인가’가 아닌 ‘인가내용 변경’으로 한다.

신규인가를 택할 경우 대구은행은 폐업처리를 해야 하고, 이 경우 기존 대

구은행이 맺은 법률관계가 신규 시중은행으로 승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법률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단, 심사요건은 신규인가만큼 강도를 높여 심사한다.

현재 지방은행의 경우 소재지 지역으로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맞춰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자격요건 등 경영관련 심사요건이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원희룡 ‘이재명 지역구’ 공천신청... “李의 정치는 권력위한 도구” /사진 뉴스1
▲ 통일차관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서 유엔사 역할 중요”

▲ 장예찬 “이준석당은 캡사이신”... 개혁신당 “張, 정치 콜레스테롤”
▲ 3600t급 장보고 3번함 건조 착수... 탐지·표적처리 성능 개선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월15일 실시 /사진 뉴스1
▲ “설 연휴 응급환자 신속 이송”... 전국 소방헬기 31대 배치